

최근 영토·해양법 관련 판례와 동아시아: 향후 발전과 과제

대한국제법학회

사회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테드 맥도먼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정리	이서연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 **송민순** 대북 압박만이 북핵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협상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 관계 없이 핵실험을 해왔으나 6자회담 진행 중에는 중국으로 인해 핵실험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
- **김성환** 중국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의견에 동의함. 한국은 미국, 중국과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잘 조정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 **천영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불거지고 있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 **김성환** 핵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붕괴한 소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핵무장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이보다는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유명환** 우리나라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옳지 않다고 생각함.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한일 관계

- **천영우**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협상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분분함. 협상 이행과 소녀상 철거 문제, 그리고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견해는?
- **유명환** 소녀상 철거와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의 이행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함. 특히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관련시켜 예산을 지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일본의 도덕적 위치가 하락하는 꼴이 될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 두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며, 재단도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역시 시기상조라고 봄.
- **김성환** 한일 관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함. 특히 통일의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송민순** 소녀상이 철거될 경우, 그 파장 효과는 엄청날 것임. 국가 간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전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임. 즉, 시간에 쫓겨 충분한 고민 없이 정치적 타결을 이루어낼 필요는 없음. 정치적 선언은 정부가 바뀌면서 또다시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지하여 외교 문제를 다루어야 함.

Keywords

동북아 신질서, 북핵 문제, 대북 제재,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관계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역시 필요함.
- 북한 비핵화에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
- 대북 제재의 목적은 제재 자체가 아니라 비핵화를 얻어서는 안 될 것임.
-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임.
-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협상 이행과 소녀상 철거 문제는 많은 고민과 논의 이후 해결해야 함.



김부찬

테드 맥도먼

이창위

백진현

박경길

이창열

- 1982년 해양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채택되고 유엔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강제적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해양 분쟁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경우 그 사법적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본 세션에서는 유엔해양법재판소의 최신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동북아시아 해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함.
- 테드 맥도먼 교수는 2013년 1월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2016년 7월 판결 예정)을 소개함. 남중국해의 해양 영토와 경계 획정 분쟁의 법적 정치적 이슈는 동북아시아의 이슈와 상당 부분 겹치므로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 해줄 것으로 기대함. 특히 바다 위로 튀어나온 대상이 유엔해양법상 섬(island)인지 암석(rock)인지에 대한 판단이 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언급함. 이 사건에서 특히 중국의 불출석(non-appearance) 문제를 자세히 다루면서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이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이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검토해 그 해소 방법을 모색했음. 최근 재판소의 법리 해석이 한국을 둘러싼 해양 경계 획정 문제에 갖는 함의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이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였음.

유엔해양법협약은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협약 탈퇴를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이창위 교수는 ICJ의 두 사건을 검토했는데, 우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주요 현안이 되었던 페드라 브란카 섬 영유권 분쟁에 대해 ICJ는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판결하였음(미들 락 섬의 영유권은 말레이시아에 주어짐).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시파탄 섬 사건을 통해 실효성에 대한 재판소의 태도를 자세히 검토함. 궁극적으로 두 사건을 검토해 한국과 일본 간 독도 문제는 이와 같은 재판소의 태도를 고려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평화적인 현상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Keywords

필리핀-중국 중재 재판, 섬, 켈식재판, 독도

- 독도에 분쟁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ICJ 판례는 '분쟁은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유권적 해석을 한 바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독도에 분쟁은 없다'고 결정할 수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 해양 분쟁 문제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해결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양국의 합의가 없으면 재판소에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도 문제의 경우 정치적 해결을 위해 '현상 유지'를 선택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공감을 얻었음.

제2차 세계대전 관련 미해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 모색

대한국제법학회

사회	전순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아시프 큐레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이함준 라메르 에릴 대표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리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BK21+ 법사업팀

-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그 이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관련국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피해자 보상 방안 등 그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이처럼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역사적 미해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려할 때 법적 해결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적 정의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정의와 다른 차원의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 따라 역사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아울러 역사 분쟁에서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법상 소급적용금지 원칙이

- 적용되지만, 이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급적용금지 원칙은 관습법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실행 등 국제법 실행상 다양한 격차가 존재한다.
- 역사 분쟁 해결을 위한 특정한 포럼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하에 대화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소급적용 방식으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중일 3국 간 구성한 TCS를 통한 3자간 대화로 역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동북아국제법포럼(ILNEAF)이 국제법에 기반을 두고 한중일 3국이 연관돼 있는 국제법 유관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관련 지식의 축적은 역사 분쟁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 위에 적극적인이며 협력적인 역사적 분쟁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